

광주시교육청, 스쿨미투 징계 고심

이른바 '스쿨 미투'에 연루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광주지역 교사 10여 명에 대한 행정상 감사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 당국과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현직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 절차가 진행중이다.

1대 1 문답 방식의 이번 조사에서는 A고교 교사 10명과 B고교 교사 2명이 차례로 소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2명과 이번 기소된 9명은 제외됐다. 감사 대상 교사는 모두 사립학교 소속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대법원 판례 검토 작업, 검찰 시민 위원회와 두 차례의 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시교육청은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기록지 등을 토대로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문답식 감사를 벌여 현행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는지, 역울한 측면은 없는지,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 등에 대한 규칙과 교육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만한 명백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대상 성희롱이 최종 인정될 경우 양정 규칙상 '배제 징계, 즉 해임이나 파면이 불가피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경우 교권 침해 논란과 충돌할 수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기소 처분까지 했는데 중징계는 너무나한 것 아니냐, '생활지도 차원에서 단진 말인데 가혹하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라는 것이냐'는 교단의 일부 불만을 의식한 고민으로 얽힌다.

이를 의식해인지 시교육청은 "(징계는) 신중하며, 엄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교육감 역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과 아동 성비위 관련자는 무조건 해임 이상 하게 돼 있어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걱정스럽다"고 운을 뗐 뒤 "신중하 가운데 엄정한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특히 "교권 보호와 아이들을 잘

장휘국 교육감 "교권도, 학생 보호도 모두 중요"

불기소 12명 문답...교육부 등 '중징계' 유권해석

가르칠 교육적 여건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할 의무 또한 크다"며 치우침 없는 판단과 조치를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두 학교에서는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들 채용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 임정에선 사실상 '물아갈 자리'가 사라진 상태여서 '이중고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A고 2명과 B고 7명은 이달 중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기소 됐다.

조인호 기자



봄을 따라 왔어요 봄 날씨를 보이는 25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주택가의 홍매화 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면서 나비 한 마리가 꿀을 따고 있다.

전남도, 구제역 경보 '주의'로 하향

전남도는 25일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지난 1월 3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긴급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경기와 충북 발생 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

후 방역지역 내 정밀감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전국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되더라도 구제역과 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

고 소독 등 차단방역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수준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철새에 의한 AI 발생 위험 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방역 관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환경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막판 총력'

소규모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한(3월 24일)이 임박하면서 환경당국이 막판 총력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농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3년 간 유예기간을 줬다.

가축 분뇨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규모 축사의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소규모 미만은 2024

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끝내야 한다.

앞서 당국은 기한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축산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적법화 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에 한해 이행 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기로 했다.

즉, 별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사라면 기한 내 허가·신고를 완료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던 것이다.

뉴스

중병원 진료예약권 부당매매범 적발

중국 병원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의사들과 진료 시간을 예약한 뒤 돈을 받고 예약권을 되파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있다.

중국 국영언론들은 24일 베이징에 있는 30여개 병원들이 이 2100명이 넘는 이러한 불법 예약자들을 적발해냈다고 보도했다.

병원들은 병원에서 자주 의사들과 예약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낸 뒤 예약 시간에 실제로 진료를 받는지를 안면인식 기술로 관촬해 돈을 받고 예약권을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넘긴 사람들을 적발해냈다.

안면인식 기술은 그러나 중국에서 14억 인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부르고 있다.

중국 공공병원들에서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의사와 예약을 하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처럼 예약 시간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가는 행위에서부터 무단횡단자를 적발하는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정부도 빅데이터를 통해 개별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추적을 시민들의 사회적 신용도를 파악하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들의 행동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에도 연계되고 있다.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애완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시킨 사람은 안면인식을 통해 항공권이나 고속열차 승차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의 사회적 신용도 규정이 지나치게 엄중해 부당하게 국민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 '독성밀주'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발생한 독성 밀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6명으로 늘어났다.

25일 신화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아삼 주에서 지난 2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156명이 사망했고 2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삼 지역의 차(茶) 농장 근로자들로 불법으로 유통된 밀주를 마시고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삼주 고라카트 지역에서 85명이 사망하고, 조르하트 지역에서 71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르하트 병원 관계자는 "24일까지 이곳에서만 사망자가 71명으로 늘었다"며 "이곳에 입원한 환자가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이 가짜로 제조한 술에서 나온 독성 물질 때문으로 보인다"며 밀주 샘플을 채취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들은 독성이 있는 술을 불법 제조 판매한 혐의로 10여명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르웨이 철로서 고압선 감전 3명 사상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열차용 터널 안 측면 선로에서 고압선과 접촉사고로 한 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공영방송 NRK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슬로 경찰서의 작전 팀장 토레 바르스타트는 왜 사람들이 터널 안에 있었는지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에 병원으로 후송된 중상자 2명은 아직 소생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들은 구조대에 의해 터널 안에 세 번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경찰은 터널 안을 수색한 결과 세 번째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는 사망이 신고되었다. 문제의 터널은 오슬로 시내 중심부 필립스타트 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측면 보조선로는 열차들의 방향을 바꿀 때에만 주로 사용되는 선로이다.

이 지역 선로의 전압은 약 1만500볼트로, 고압선 설치물이다.

철도회사 바네 노르의 공보관 헤리 코르슬룬드는 NTB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립스타트의 이 작은 터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간 지역은 정규 교통 수단이나 통로의 목적이 아닌 터널이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매체들은 이 터널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열차 교통의 지장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는요... 자라치로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